



인천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민·관 합의로 새길 열어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 협의가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게 됐는데 28일 오후 인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밝혔다.

인천은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주)인천로봇랜드(특수목적법인)가 합의약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조동암 인천도시공

사 사장, 박철휴 (주)인천로봇랜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그간 답보 상태로 있던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 내용에 따르면 토지주인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조성실행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인천로봇랜드는 사업시행자가 위탁하는 범위 내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성·관리·운영 등의 업

무와 테마파크(유원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주)인천로봇랜드의 민간투자자는 경제자유구역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용지를 매입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안은 개발을 진행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했다.

또한 테마파크 개발과 공익시설 공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또 인천도시공사도 시행사의 지휘를 확보함으로써 그간 많은

시행의 경험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로봇랜드를 국내 최대 로봇산업의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려면 원스톱 인프라 구축과 산·학·연·관 통합과 로봇 기업 지원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 약정 체결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청라 국제도시에 76만9279㎡ 규모의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업용지, 업무용지, 로봇체험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 등 후속 행정절차를 준비해 2024년 기반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다시 판이 짜인 사업은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재윤 기자

데스크칼럼



김 양 훈
논설위원

대한민국 시민단체와 연계하면서 기득권 세력이 된 이 시대 권력자들은 386세대로서 학생운동 등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활동은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에 항거한 명분이 뚜렷했다.

당시 학생들이 장성하여 정계 등으로 진출하면서 노무현·문재인 정권과 박원순(고) 서울시장까지 당선되어 권력자로 부상한 이후 시민단체 보조금도 천문학적 액수로 불어났다.

박근혜 정권을 촛불로 무너지도록 만든 영향력 또한 시민사회 활동이 있었다. 정계에 진출한 정치인들은 시민단체와 연계된 인사들이

많아지면서 저변확대는 대한민국 주류를 이루었다.

참여연대 박원순이란 인물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시민단체가 더 표면화되어 중앙부터 공공기관 깊숙이 파고들었다. 진보 정권을 세우는데도 한몫을 했다는 것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의당 뿌리 또한 노동계 민주노동당이고도 때려야 떨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은 이 같은 세력을 진보나 좌파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확장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든 것이 진실이다.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보적 인사들이 무수히 당선됐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자 보수는 그야말로 설 자리를 잃었다. 진보의 썩 세력들은 정권이 바뀌자 일제히 수면 위로 부상했다.

혹자의 국민 여론은 진보는 자신들의 식구를 챙기는 의리가 남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보수는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조직 등 이용만 한다는 비판이 있어 비교되는 대목이다.

선거 때 보수 정치인은 이용할 줄만 알았지 썩이 흐리다는 평가는

불편한 진실이다. 이권을 챙기라는 사실이 아니라 평소 지지자들과 소통을 강조하는 의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은 그 나물에 그 밥이란 곱지 않은 시선인데 재식구 챙기기는 차라리 좌파가 낫다는 평가다. 실제 이런 민낯은 공개적으로 부상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고 내용이기 때문이다.

언론도 누군간 다루어주어야 했다. 그냥 넘어가는 것도 정신을 못 차리는 보수의 행동이 선거 당시와 당선·패배 이후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보수나 진보의 논공행상은 다 똑같다.

이와 같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로 시민단체 보조금과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당선되어 힘을 실어준 결과론은 시민단체 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발로가 달콤한 꿀이 됐다. 보조금 등 외부인사 자리, 민간위원들 공공기관 개입은 여야 구분이 없이 권력을 잡

으면 판을 바꾸는 현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가 정부를 감시하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문제를 공론화시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했다. 그러나 권력을 탐하는 활동으로 변질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은 시민단체가 민간 권력의 핵심부가 됐다고 한다. 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게 배를 채워 윤석열 정부에서 칼을 빼 들은 원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도 알고, 정치권도 알고 있었다. 함부로 손 될 수가 없는 계류과 같은 문제로 윤 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 부패 카르텔을 손본다는 사실은 지지받을 일로서 청산의 시대가 됐다.

국민의 혈세가 시민사회 활동비 명분으로 갈취를 당했기 때문이란 다. 시민단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려운 길이다. 일부 시민단체 모습은 이제는 제왕적 민간 권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활동인지 정권과 결

탁하고 영리의 배를 채우는 시민단체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좌파·우파의 시민단체 활동은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는 모습에 국민적 실망은 크다. 한쪽으로 편향된 시민단체 활동과 정치권에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즐비하다. 국민 정서를 조장시킨 부끄러운 모습은 정권 따라 투쟁 기조가 달라져 정치에서 손을 떼라고 꼬집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치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집회 등 선동은 자칫 정치 행위가 된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식사회도 정권에 따라 시민단체 눈치를 보면서 혜택을 주었다. 다행히 국가 보조금도 받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있다. 그러나 세력이 큰 시민단체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 책임은 누가 질까?

윤 정부는 이번 보조금 부패 카르텔을 강력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안 된다는 소리도 있다. 계류과 같은 시민단체의 개혁이 기대된다.

계류 시민단체·정치, 변해야 할 시대적 요구

인천기계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 '부활' 기대된다

국가 경제는 제조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렵다. 국가기간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공업단지인 국가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조성이 시작돼 60년간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돼온 산업단지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설·제도·인력 노후화로 '삼로(三老) 산업단지'라는 말까지 나온다. 도로·배수관 등이 낡은 시설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다. '업종 제한' 같은 해묵은 규제 때문에 첨단 업종은 들어오지 못하고, 용도 규제로 편의점·카페 하나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자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 산업단의 청년층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

국가산단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연구개발(R&D)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음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노후 국가산단에서 인공지능(AI)·로봇·메타버스 등 신산업 제조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공장 가동률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50인 미만 기

업의 경우 68.3%로 감소됐다. 제조업체의 적정 가동률은 80% 수준인데, 60% 이하로 내려앉았다는 것은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산단의 불이 꺼져간다는 한탄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노후 산단을 방치할 게 아니라 '미래형'으로 바꾸는 산단 대개조가 필요하다. 산단을 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세계가 제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산단 재생'은 후방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노후한 산단의 공장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DX)·탄소중립(CN)·안전유형 진단(Safe TT)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인천기계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 2곳이 최종 선정돼 뜻 깊다. 인천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2015년 선정)와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2020년 선정)에 이은 세 번째로, 일반산업단지 중에는 처음으로 선정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인천기계산업단지에는 183개 업체, 인천지방산업단지에는 578개 업체가 있으며, 두 곳에는 모두 95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두 곳의 산업단지 모두 1970년대에 조성돼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도 열악한 실정이다. 이는 구인난과 가동률 저하 그리고 산업단지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물론 과제가 적잖다.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한 일자리 문화공간 구현이라는 비전과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정비 △뿌리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구조고도화 △문화산단 및 스마트산단으로 이미지 개선 등의 추진전략을 재생 사업에 담아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우리 경제 제조업의 중심인 국가산단이 글로벌 트렌드인 저탄소경제 시대에 환경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인 국가산단이 활력을 찾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기계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의 '부활'이 기대된다.